

# 국민 48% “정부 감염병 대응 신뢰 못해”

### 방역당국 신뢰도, 조사 이래 최저 브리핑 신뢰도·유익성 모두 하락

국민 절반 가량이 감염병 대응 주체로서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반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선 서울대학교 교수팀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6일간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 3.1%포인트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감염병 대응 주체로서 정부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52.4%는 신뢰한다고 답했고, 47.6%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 신뢰도는 코로나19 초창기였던 2020년 6월 59.1%, 2020년 10월 60.9%와 비교할 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뢰한다는 응답률 52.4%는 지난해 7월 52.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등 방역당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63.3%였다. 이는 유 교수팀이 실시한 조사에서 가장 낮은 기록이며 2020년 6월

83%보다 약 20%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신뢰도의 경우 ‘의료진’이 80.6%로 가장 높았고 ‘과학 전문가’ 77.2%, ‘나의 이웃과 주변 사람들’ 55.9%, ‘기타 대부분의 사람들’ 45.9% 순이었다.

코로나19 정보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84.3%가 관심을 기울인다고 답했으며 2020년 4월과 비교해 정부와 방역당국의 정례브리핑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응답은 79.3%에서 35.6%로, 신뢰한다는 응답은 75.3%에서 37.6%로, 유익하다는 응답은 77.4%에서 32.8%로 각각 감소했다.

한국 사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잘 했느냐는 질문에는 42.5%가 잘했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59.9%에 비해 17.4%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보건 의료 요소에서 대응을 잘했다는 응답이 56.2%로 가장 높았고 정당 및 의회 요소에서는 잘못했다는 응답이 34.3%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27.8%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역대 조사 중 처음으로 20%를 넘는 최대 수치다.

반대로 감염 결과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47.9%였는데 이는 설문조사 결과 가장 낮은 수치이자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단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에 대한 우려 조사를 보면 77.6%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 중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83%가 우려를 표시했다. 자녀가 없는 응답자의 우려도는 55.1%였다.

유 교수는 “델타보다 매우 높은 전파력과 그에 비해 낮은 중증·치명률 등 오미크론의 바이러스 특성이 주관적 위험판단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역당국이 소아·청소년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인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와 가족에 눈높이를 맞추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소통하는 공감의 노력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위험의 사회적 통제 가능성은 36.6%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63.4%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각각 가능하다는 응답은 역대 최저,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역대 최고다.

응답자 52.6%는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1~2년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 39.9%보다 증가했다. 반면 이 같은 조치가 2년 이

상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같은 기간 49.1%에서 19.2%로 줄었다.

백신 접종에 대한 태도로는 37%가 공동 책임, 23.6%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했다.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상황에서 필요한 방역 전략으로는 23.6%가 사회적 피해 최소화, 14.4%가 감염 역제를 꼽았고 48.1%는 둘 다 맞다고 생각했다.

재택치료 체계, 격리 단축, 위치 추적 폐지, 자기입식 역학조사, PCR 검사 우선순위 등 달라진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타당성, 지속성 등이 모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신속항원검사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을 경우 54.2%가 정확할 것 같다고 생각했고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51.4%가 정확하다고 답해 오히려 정보를 알고 난 이후 정확도에 대한 긍정적 비율이 감소했다.

유 교수는 “정부와 보건당국의 방역 정책은 감염 상황과 보건 의료 현장의 여력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하더라도, 국민을 향해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국민의 현재의 경험과 필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방역 정보제공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 순천경찰, 유관기관 합동 신학기 맞이 등굣길 캠페인 전개

순천경찰서(서장 최병운)는 최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순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순천향림중학교 앞에서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 나주경찰, 신학기 아동안전지킴이 8명 대상 직무교육 실시

나주경찰서 금성지구대(대장 김진희)는 신학기를 맞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아동안전지킴이 8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대응 및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기동취재본부



### 광양경찰, ‘안전한 광양 만들기’ 위해 현장간담회 실시

광양경찰서(서장 장진영)는 안전한 광양 만들기를 위하여 전 지휘부와 함께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양=심종섭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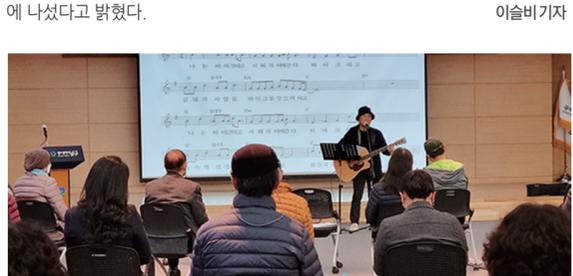
### 담양소방, 봄철 화재예방 대책 ‘안전하기 좋은 날(D-day)’ 실시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재래시장 등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점포·대상물 관계자 자율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 광주동부소방의용소방대, 드론장비 활용한 산불감시 선제적 대응

광주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관해 무등산국립공원과 산림업 민가지역 등 취약대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슬비기자



### 광주남구, 시민 통일강사 ‘제1기 평화 도슨트’ 양성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제1기 평화 도슨트’를 본격 양성한다. 오유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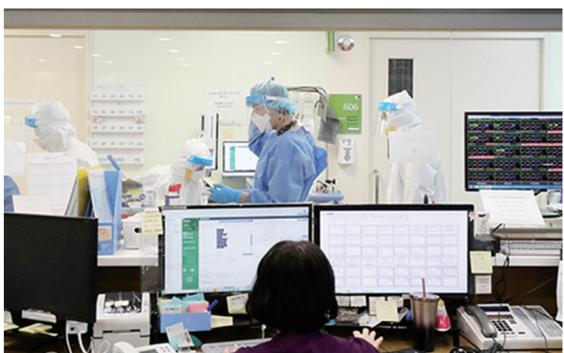
### 코로나19 사망자 급증, 수도권 화장장 ‘포화상태’

코로나19 사망자가 293명으로 집계된 1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유족들이 앞 순서 유족의 화장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등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자 지난 11일부터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의 하루 화장 건수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의 화장장이 여전히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293명으로 집계된 1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유족들이 앞 순서 유족의 화장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등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자 지난 11일부터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의 하루 화장 건수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의 화장장이 여전히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다.

## 경증 확진자 기저질환, 일반병상서 우선 치료

### 입원환자 4명 중 3명 기저질환자



코로나19 중증으로 음압병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 배정반에 병상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박학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위중증환자 약 2000명까지는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병상 운영을 효율화할 경우 2500명 정도까지도 감당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65.1%로 총 2779개 병상 중 1808개가 사용 중이다.

정부는 일반병상 중심의 입원진료체계 안착을 위해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코로나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액 계산 수가를 적용한다. 확진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하다. 최종 지원 금액은 17일 의료기관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슬비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입원환자의 기저질환은 음압격리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 치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4명 중 3명이 기저질환 치료자라서 병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음압격리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한다”며 “한시적인

센터비 제공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기준 입원환자 1만 6086명 중 74.8%는 코로나 치료 외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한 환자였다. 이에 코로나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오는 16일부터는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한다.

서선욱기자

###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 검사 ‘희비’ “대기 너무 길어” vs “오히려 편해”

#### 검사 즉시 확진 판정

동네병원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판정앞으로 한 달 동안 전문가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로 즉시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동네 병·의원들은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은 시민들 사이에선 이전보다 검사 방식이 간단해 편해졌다는 입장과 대기가 길어 오히려 불안하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페이스 워드를 켜 채 바베 점수를 받고 있던 병원 관계자는 “대다수가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라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정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 김모(34)씨는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김씨는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데 대기하다가 늦을까봐 출근지 근처 병원을 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밀집 접촉자로 분류돼 회사로부터 검사 받기를 권유 받은 직장인 윤모(43)씨는 “밀집 접촉자가 많은 곳에 오니까 심적으로 불안한 게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의 확진판정으로 검사를 받으러 온 신모(42)씨는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 다른 용무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못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일부 시민들은 전문가의 검사로 확실한 결과를 받아들 수 있어 안심이 되고 검사방식도 PCR(유전자 증폭)보다 간단하다고 평가했다.

직장인 최모(34)씨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서 “결과도 빨리 나오고 코를 깊숙하게 찌르는 부담도 없다”는 생각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6만2338명 늘어 누적 722만85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 집계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건수도 포함됐다.

이슬비기자